

복지 최우선...민생경제 활성화 다짐

광주 5개 구청장 구정 운영 비전

광주지역 5개 구청장은 민선 7기가 공식 출범한 2일, 취임식과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4년간의 구정 운영 비전을 제시했다.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북상에 따라 대부분 취임식은 취소한 가운데 각 구청장들은 재난대책 점검과 봉사 등으로 업무를 시작하며 '주민을 중심에 둔 자치행정'을 다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날 발표한 취임사에서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 구청장은 "동구는 광주의 오늘을 있게 한 원도심이자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은 전통 깊은 역사도시지만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경제살리기 전담부서를 설치해 동구를 7대 상권으로 나눠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특성화사업을 펼치겠다"며 "청년이 돌아오고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이날 구청에서 취임식을 열고 "사람 중심의 새로운 서구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주민이 당당하게 요구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며 "이를 위해 일자리와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고, 구청장 직속의 일자리위원회 신설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와 노동조합 간 갈등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고 소통하면서 노조와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겠다"며 "분열을 치유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주민 통합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마을과 거리마다 문화가 살아 숨쉬고, 모든 세

재난대책 점검·봉사로 업무 시작...주민 중심 자치행정 실현

대와 계층에 복지 혜택이 충분한 행복 도시를 만들겠다"며 "남구를 광주 대표 경제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며 비전을 제시했다. 김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경험과 중앙정부 인맥을 활용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겠다"며 "백운광장에서 빛가람 혁신도시까지 이어지는 국도 1호선 주변에 에너지 산업 융복합지구 조성하고 국내외 공공기관과 기업연계, 한전공대를 유치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인 북구청장도 이날 발표한 취임사에

서 "44만 북주민과 함께 '소통'과 '공감'으로 더불어 잘 사는 행복북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 구청장은 "활력을 잃어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산업단지 내에 '경제총괄상황실'을 설치하고, 산·학·연 클러스터를 연결해 일자리도 창출 하겠다"며 "광주역 KTX 재진입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주민 의견수렴과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선방직 이전과 용봉IC 개설, 교도소 이전 등의 현안도 집중 관리해 해결책을 마련해나간다고 설명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내고 "민선 7기 구정목표를 '내 삶이 행복한 매력, 활력, 품격 광산 만들기'로 제시한다"고 밝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공간구조 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실질적 개선, 자치행정 혁신 등의 전략을 추진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이어 "남북화해 분위기가 구제화되면 광주송정역이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역이자 종착역이 될 수 있다"며 "남북교류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창의적 발전과 혁신적 시도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2일 문인(왼쪽 두번째) 북구청장과 간부공무원들이 취임식을 대신해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배식봉사를 하고 있다.

중기부, 전통시장 희망프로젝트 사업 광주·전남 4곳 선정

무등·남광주·여수전통서시장·강진중앙로상점가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형)은 2일 올해 전통시장 희망프로젝트 사업대상으로 광주·전남지역 4개 시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정된 시장은 문화관광형 분야 '광주 무등시장'과 '여수전통서시장'이 선정됐고, 첫걸음시장 육성대상으로는 '남광주시장'과 '강진중앙로상점가'가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형 시장은 2년간 최대 10억원(국비50%·지방비50%)을 지원해 시장과 지역 특성에 맞는 구매·관광인

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또 대표 먹거리 등 쇼핑 콘텐츠 개발로 특화사업을 수행할 방침이다.

무등시장의 경우 중앙광장에 유명셰프 등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을 통해 주변상가를 활성화하고, 방송 등을 활용한 시장홍보와 청년상인육성, 핵점포 개발을 통한 유입고객 증가로 지속가능한 성공모델을 수립할 예정이다.

여수전통서시장도 관광도시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먹거리 콘텐츠를 개발해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

다.

전통시장의 기초체력 배양을 위한 첫걸음 시장 육성사업은 1년간 3억원 이내(국비 50%·지방비 50%)를 지원하며, 카드결제와 고객신포, 위생 및 청결 등 3대 서비스 혁신과 상인역량 강화 등 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김진형 청장은 "지난해 봉선, 말바우시장 등 2곳이 특성화시장으로 선정된 것에 이어 올해도 4개 시장이 선정됐다"며 "우리 지역 전통시장의 지속적인 자생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 동구의회 의장에 박종균



광주시 동구의회는 2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에서 박종균(사진) 의원을 제8대 전반기 동구의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단독 입후보한 박 의원은 전체 의원 7명 중 만장일치로 의장에 당선됐다. 부의장은 조승민 의원, 의회운영위원장은 홍기일 의원, 기획총무위원장은 정미용 의원, 사회도시위원장은 전영원 의원이 각각 맡는다.

박 의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뿐만 아니라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동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일반 도시가스 소매요금 동결

광주시는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일반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동결하기로 했다.

시는 소매비용 산정을 위해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정한 '일반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기준'을 반영, 외부 전문회계기관의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요금 결과 소매공급비용이 메가주울(MJ)당 2.0680원에서 2.0738원으로 종전보다 0.28% 인상요인이 있지만, 지방선거 후 물가 안정과 시민 체감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요금을 동결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정용 난방세대의 월 33원

의 요금인하 효과와 함께 영업용·산업용 수요자의 연료비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소매 요금 인상요인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고객센터 위탁수수료 증가,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따른 총 공급비용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원가상승 요인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자가 경영효율화를 통해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시 소매공급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개정된 공급비용 산정기준과 지침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동물복지형 농장 18농가 추가 지정

연말까지 200개 농장 확대

전남도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18개농가를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전남 지역 녹색축산농장은 78곳으로 늘었다. 도는 올해 200개 농장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신청농가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18개농가를 추가 지정했다.

축종별로 한우 8농가, 돼지 5농가, 육계·산란계·오리 각 1농가, 흑염소 2농가다.

이들 농가는 가족 사육밀도, 축사 내부 청결상태, 가족 운동장 확보 여부, 농장

경관, 기록관리 등 22개 항목 평가에서 총 배점의 80% 이상(200점 만점 중 160점 이상)을 획득했다.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에는 농가당 300만원 이내의 농장 운영자금 지원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및 녹색축산기금 융자 등 축산정책사업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된다.

배운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소비자의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가족 사육 환경 개선, 위생적 사육관리를 통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도 많은 축산 농가들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지방선거 후보 10명중 6명만 선거비용 100% 보전

선관위, 9266명중 5640명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10명 가운데 6명 정도만 선거비용을 100% 보전받게 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지방선거 보전청구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 6619명이 득표율에 따라 100% 보전은 전체 의원 7명 중 만장일치로 의장에 당선됐다. 부의장은 조승민 의원, 의회운영위원장은 홍기일 의원, 기획총무위원장은 정미용 의원, 사회도시위원장은 전영원 의원이 각각 맡는다.

박 의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뿐만 아니라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동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별 보전청구 대상자는 ▲ 시도지사 후보 36명(이 가운데 100% 보전은 33명) ▲ 교육감 후보 52명(100% 보전은 46명) ▲ 기초단체장 후보 543명(100% 보전은 499명) ▲ 광역 지역구 의원 1681명(100% 보전은 1539명) ▲ 기초 지역구 의원 3941명(100% 보전은 3157명) 등이다.

이날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국회의원 재보선의 경우 모두 27명(100% 보전은 25명)이 선거비용을 보전받게 된다. 이번엔 국회의원 후보로 46명이 등록했다는 점에서 54%만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게 된다.

한편 선관위는 중앙 및 시도 위원회 등에 '선거비용 실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11월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지 실사, 교차분석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의 표를 얻으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절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옛. 밝은광주안과

밝은광주안과의 새 이름

신세계안과

SHINSEGAE

스마일 / 라식 / 라섹
노안 / 백내장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년 1.75% 가능

직접 운영하실 분 ▶ 평만 있으면 발전 설비해 드립니다.
원금, 이자 빠고 8~10% 가능

땅만 빌려주실 분 ▶ 20년후 기부체납 (임대비 선불로 드립니다)

햇빛 농사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